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74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2월 21일 (음력 1월 17일) 목요일

극우세력 5·18 폼훼 ‘잇단 유공자 명단 요구’

대한애국당 조원진·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광주시에 유공자 개인신상 자료 제출 요구해 광주시 “해당 사항 없고, 정보 공개는 위법”

극우세력의 5·18민주화운동 폼훼와 왜곡, 정치적 악용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지난 11일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조 의원은 5·18유공자 현황, 5·18유공자 중 역대 국회의원 현황 및 사유, 5·18유공자 등록 후 취소 현황 및 사유, 유공자 지역별 등록 현황, 보상 심사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보상비 지급 현황 등을 요구했다. 또 5·18유공자별 피해 정도, 피해 당사자와 유족, 유공자 선정 연도까지 구체적인 개인 정보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한애국당 최고 위원회에서 “국가보훈처가 5·18민주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법이 통과돼 매

년 5·18민주유공자의 현황과 그들에 대한 지원 현황 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망언 공정회를 개최했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10월 5·18유공자 현황과 보상금 지급액수, 지급현황 등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두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극우세력들이 가짜 5·18유공자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수단체인 자유연대 회원 200여 명은 지난 16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집회를 갖고 가짜 유공자 의혹을 제기하며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특히 유공자 명단 공개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보수단체인 자유연대가 지난 16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회원 250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5·18 유공자 명단공개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시는 이들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해당 사항 없다고 답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유공자 신상정보

는 광주시 관리 대상이 아니고 국가보훈처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보상지와 유공자 숫자를 비교하고 어떤 사람이 유공자인지 확인하는 것도 위법이다”고 말했다.



물망초

국회의원 5선을 자낸 박찬중변호사가 20일 자유한국당 전남대회에서 벌어지는 계파 투쟁 태극기, 5·18 공청회(논란)이 모든 후유증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0원 혼란을 끝내려면 박 전 대통령은 보수 대통령을 위해 나를 영원히 잊어주시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한국당이 작년 지방선거에 참패한 이후 당을 위기에서 구해줬다고 비상 특별대책위를 구성했지만 여전히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당이 중앙집권적, 중앙집권적 대표체제를 극복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후 유증을 극복해야 하는데, 여전히 극복을 못하고 친박비박 논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얼마 전 유명 변호사가 황교안 전 총리가 박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썬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는 억울하다는 박 대통령의 말을 대변한다고 본다”고 했다. 관련 인사들의 추세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시스



한국노총 전남본부 대의원대회 성료

어제 회의 갖고 올해 사업계획·예산 등 의결



한국노총 전남본부(의장 이신원)는 20일 한국노총 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등을 심의 의결했다. 한국노총 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총 박대수 상임부위원장, 김영미 광주지방노동위원회 등 내외 귀빈과 대의원 11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본부는 이날 대의원대회를 통해 올해 핵심과제 및 사업을 선정하고 앞으로

△노조법 개정과 타임오프개정 △산업안전보건 활동전개 △4차 혁명과 미래일자리 문제 △국민연금제도개선 △사회 안전망 확대 투쟁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신원 의장은 “한국노총은 어렵게 만들어진 탄력근로제 합의내용이 훼손되지 않고 입법과정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해줄 것을 바란다”며 “한국노총도 법개정 과정에서 법 시행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노총은 조직화되지 않는 노동자에게 오남용 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반과 상담소를 통해 법률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격려사에서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많은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으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서 “19일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안에 어렵게 합의하였으며 탄력근로기간이 6개월로 확대됨에 따른 임금보전 및 노동시간에 따른 11시간 연속 휴식권 보장 도입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최남규 기자

전남경찰, 사망 교통사고

10건 중 3건 ‘고령운전’

전남경찰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안전운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경찰청은 20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 강화와 운전면허증 자동 갱신 등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지난 2014년 9만646명에서 지난해 기준 13만73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지난해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9819건 중 고령운전자 사고는 1884건으로 19.2%를 차지했다.

사망자도 전체 338명 중 104명(30.8%)이 고령운전자였으며 매년 8%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177건(35.4%)로 가장 많았으며 승용차 108건(21.6%) 순이었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은 자치단체 노인회,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운전면허시험장과 멀리 떨어져 있어 고령운전자 운전능력 자가진단을 하지 못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안전운전 출장 교육’도 실시한다. 이윤규 기자

KFS 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Fb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매매·임대차·매입비축·임대주택

- 매매·임대를 통한 영농규모 확대 지원
- 고령운전,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임대
-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 받아 임대

청년창업농, 2030세대, 귀농인 농지지원

- 청년창업농의 빠른 영농정착을 위해 우선 지원
- 생애 첫 농지구입자 저리 지원, 5~10년 장기임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 및 환매 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연금사업

-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중도인출 가능)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영농 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 임대 시 매월 보조금을 지급(75세까지)

독특한 농지관리 전문가 농지은행 | 든든한 노후생활 도우미 농지연금 | 문의 전화 1577-7770